

‘광주 스쿨 미투’ 수사 놓고 엇갈린 시선

교사 16명 중 15명 성추행 ‘혐의없음’...교육청, 수사 미흡 주장 경찰 “피해 학생들 진술 거부에 발언 내용도 성희롱 적용 어려워”

광주지역 교육계를 떠들석하게 했던 ‘광주 M고교 스쿨미투’ 사건으로 입건됐던 교사 중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청 등 일부에선 경찰 수사가 다소 미흡했다는 주장이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교사들의 행위에 과도하게 법리를 적용하려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쿨미투로 경찰에 입건된 교사 16명 중 15명의 교사가 제자를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 중 대부분은 피해학생의 진술 거부 등에 따른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것”이라며 “그렇다고 이들의 성희롱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수사에 불신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9월 광주시교육청은 M고교 전교생(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스쿨미투’ 전수조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6명을 광주광산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반면 경찰은 전수조사에서 스쿨미투를 호소했던 학생들이 경찰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한데다, 진술 자체도 성희롱 혐의를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2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M고교 교사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교사 4명에 대해서는 폭언과 욕설 등으로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송치했다. 나머지 교사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유일하게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교사는 수업 도중 자고 있던 학생을 깨우면서 학생 얼굴을 쓰다듬은 혐의다.

또 폭언과 욕설 혐의로 기소된 교사 4명은 학생들에게 ‘이년아, 저년아’ 등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수년간 해온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은 ‘년’이라는 발언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친밀감을 갖고 대화하려는 의도였을 뿐 결코 학생을 무시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내부에서도 교사의 이 같은 발언이 학대 혐의 적용 대상인가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이들 4명을 포함해 15명의 교사는 성추행·성희롱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은 학교 전수조사에선 성희롱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들이 경찰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학생들이 전수조사에서 밝힌 수업 도중 ‘너희는 아기가 잘 낳으면 된다’, 여름철에 ‘교복을 (상의를) 왜 열고 다니냐’ 등의 발언이 성적요소는 있으나,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보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광산경찰은 “교사 4명의 경우 직접 추행은 없었으나 정신적, 성차별적 폭언을 했다고 판단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나머지 11명의 교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접수됐지만, 피해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고 발언내용도 성희롱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물론 수사결과를 바라보는 교사들의 시각도 차이가 난다.

광주의 한 고교 국어교사는 “아이(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보이기 위해 그들이 쓰는 은어를 함께 쓰기도 하고, 수업도중 집중력이 떨어질 땐 유머성 발언을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같이 웃고 즐거워 한다”면서도 “스쿨미투 이후 수업과정에서 남녀 구분만 나와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 말조심을 한다. 갈수록 학생들과 애써하게 대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광주시교육청과 일부 학부모들은 교사들도 학생의 성인지도와 감수성 변화에 보폭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근창 광주시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장학사는 “아무런 의도 없이 친밀감을 가지고 했다라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면서 “일부에선 스쿨미투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서로를 존중을 해줘야 교사 인권도 살고 학생 인권도 살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115억 횡령하고 성탄절 이브 잠적

골프장 회계담당자 2~4일 간격 5000만원~2억원 빼돌려

경찰, 신고 받고 수사 착수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4일 간격으로 5000만원에서 2억원대의 돈을 은행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전까지 골프장에 출근해 마지막 50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휴대전화로 고고 잠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골프장에 입사한 뒤 회계담당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은 일단 회계담당자인 A씨가 단독으로 장부를 관리했고 다른 직원들은 거래처와의 결제에 관여하지 않은 탓에 손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내부 공모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골프장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길 건너던 80대 노인 치어 숨지게한

뺑소니 1t 화물트럭 운전자 붙잡아

광주북부경찰은 25일 길을 건너던 80대 노인을 친 뒤 도주해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에서 편도 3차로를 무단횡단하던 B(여·87)씨를 1t 화물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상가 상인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후 2시간 만에 숨졌다. B씨는 인근 공원으로 운동을 하러 가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남고속도로 톨게이트 CC-TV 등을 통해 A씨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한 뒤 긴급체포했다.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지점을 지나가긴 했지만 사람을 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사결과 발표한 날 광주서 또 BMW 차량 화재

BMW 화재 민관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당일 광주에서 또다시 BMW 차량 화재가 일어났다.

지난 24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강모(46)씨의 BMW 320d 차량에 불이 났다.

불은 차량 대부분을 태우고 인근에 주차돼 있던 K5와 모닝으로 번져 출동한 119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 추산 13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강씨는 소촌동의 한 사무실에서 출발해 3km를 주행하던 중 차에서 불에 타는 냄새를 느꼈고 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하자 불길기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운전석 열선 시트를 켜자 이상한 냄새와 함께 보닛에서 연기났다”는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씨의 차량은 2009년 식으로 BMW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성탄절 썰매타기 즐거워요”

성탄절인 25일 광주시 북구 패밀리랜드 눈썰매장을 찾은 가족들이 썰매를 타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 타면 출발 ❌

다 매면 출발 ○

국민 안전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까지 확대/시행됩니다

*위반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9월 28일,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법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불허 판결

“사생활 침해 위험성 크다”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재모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씨 등은 지난 4월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의 이름 세글자 중 가운데를 제외한 글자 공개, 유공자별 공적 사유, 2017년 증가한 151명에 대한 등록

사유 및 심사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이름 중 일부를 가렸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알 수 있다”며 “심사자료는 목적 외 이용과 제3자에게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채씨 등은 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18 유공자, 유족 등 명단과 사망·행방불명 등 경위·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며 “국가보훈처의 심의·의결 절차나 국회의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 등 유공자 등록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훈처는 5·18 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유공자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 등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명단을 공개한 것이고, 5·18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피부 주름 없애는 ‘조직겨상용 이식물’ 삽입술 특허 적법”

대법원 “기술 진보 인정”

처진 피부 속에 이식물을 넣어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피부주름을 없애는 시술인 ‘조직겨상용 이식물’ 삽입술은 적법하게 등록된 특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기기 업체인 P사가 김모씨의 발명인 조직겨상용 이식물의 특허를 취소해달라던 낸 등록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0월 처지거나 주름진 피부 및 피하 근육조직에 메쉬(그물망)형 임플란트와 생체삽입용 실을 넣어 당기는 방식의 ‘조직겨상용 이식물’ 특허를 출원

해 이듬해 6월 특허등록을 마쳤다.

P사는 2015년 “조직겨상용 이식물이 합성실의 미세한 돌기를 잡아당기는 시술법인 ‘실겨상술’ 등 기존 특허발명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특허등록 요건인 기술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허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선행 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특허등록이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객실 없다는 말에 호텔서 행패 50대 성탄절 연휴 경찰서행



○...크리스마스 휴일을 맞아 만취한 50대 친구와 함께 호텔을 찾았다가 객실이 없다는 말에 행패를 부려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A(56)씨는 이날 새벽 5시 20분께 서구 한 호텔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직원 B(20)씨의 팔과 가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욕

설을 하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너무 많이 취해 호텔을 찾았는데, 방이 없다고 해 순간 화가났다”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행패를 부린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